

# 여성정책동향

- 국내 · 외 여성동향(1/4분기)
- 2013년 중점 연구과제 소개
- KWDI 동정(여성신년인사회, 연구과제성과발표회 등)

##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 (2013. 1-3)

2013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여성대통령 출범이라는 커다란 이슈로 시작되었다.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 ● 박근혜 정부 여성 부문 국정과제, 일자리·복지·안전·사회통합이 핵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5대 국정목표와 21개의 국정전략 및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문은 일자리, 복지, 안전, 사회통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정목표2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전략7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과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전략8의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전략10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및 무상보육 확대 등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구성하고 있다. 국정목표4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는 전략 14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가정폭력 방지, 전략 17의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여성관련 과제들의 특징은 크게 일자리와 안전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성주류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문제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의 시급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정 소수 여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여성들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길 여성대통령 국정 운영에 기대를 걸어본다.

### ● OECD,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

OECD는 2월 5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보고서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소득불평등 증대와 상대적 빈곤의 증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제시하였다.

OECD가 제안한 구체적인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해결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의 세 가지 주요 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LSP), 고용보험제도(EI),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괄하는 정책의 개혁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 불평등 시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제도들의 융합을 통한 실질적 접근방식의 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로 여성취업 장려 등을 제안하였다. 정규직 보호완화와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사회보험만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맞는 좀 더 장기적인 전망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연근무제 확대에 의한 여성취업 장려도 오히려 현재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가정양립 정책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 강화 등 상호 보완적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통합정책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아동 및 노인 돌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통합과 전체 또는 부분으로 유연하게 결합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확대의 필요성을 국민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책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 ILO, 세계 가사노동자 통계 및 법적 보호 현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2011년 제100차 국제노동기구 연차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후 처음으로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Domestic workers across the world : Global and regional statistics and the extent of legal protection)』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0년 기준 세계적으로 약 5,260만 명이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3%가 여성이며, 전 세계 여성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중 29.9%의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과 10%의 가사노동자만이 일반노동자와 같은 정도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사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 제한 규정, 최저임금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사회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성별분업 및 가부장제 잔재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당연시 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공적 영역에

서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증대함에 따라 가정 내 돌봄노동을 대체할 인력의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성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 심화

1월 9일 서울북부지법(오원찬 판사)의 성매매특별법의 일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sup>1)</sup>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 여성 수는 2007년 기준 약 27만명(인터넷 성매매 및 기타 방식의 성매매 여성 포함)<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성착취 혹은 성노동 논쟁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취약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일단 접어 둔 조치로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 등 근본적 대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한 합의문 채택

2013년 3월 4일~3월 15일 개최된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130개국 정부, 정부간 기구, 시민사회 대표 등은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합의문(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문 도출에서 더 나아가 여성·여아 대상 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대상 폭력 종식 및 예방을 위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여아 대상 폭력이 만연하는 현실에 대해 경고. 둘째, 여성·여아 대상 폭력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심과 실천 확대 촉구. 셋째, 교육, 인식제고를 통한 폭력 예방. 넷째,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의 양성불평등 문제 해결. 다섯째, 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 성 및 생식 보건권 보호 등 폭력생존자를 위한 다각적 서비스 체계 마련. 여섯째,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이다.

여성·여아 대상 폭력 예방 및 철폐 문제에 있어 한국은 다분히 후진국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여성 대상(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표방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 21조 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 여성 수는 2010년 현재 14만 2,000명(인터넷 성매매, 변종 성매매, 해외 성매매 여성 미포함)임.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3W(Women, Web, World)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여성정책을 여성(Women), 웹(Web), 월드(World) 등 3W에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로 엮는다’는 의미의 웹처럼 여성 인력 간 네트워크를 강조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스템’을 꼽았다. 조 장관은 “전통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공조를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전통방식을 벗어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총리실과 상의해 타 부처와의 조율 · 협조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세계여성포럼 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다”며 “국가 위상에 맞도록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3W 정책을 요약해보면, 여성정책의 타 부처와의 협조와 국내 여성정책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향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족하였던 타 부처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조는 여성정책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방법적 접근이다. 그러나 기존 여성정책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내실 있게 하는 것도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용과 방법 간의 균형 있는 운영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 국민 민원, 남녀 모두 고용·임금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은 출산·보육, 남성은 군복무·보훈이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출범이후 6년간(2007~2012)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2년 총 59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0%(290만 2천 건), 여성이 30%(125만 3천 건)로 나타났다. 여성의 TOP 5 민원주제는 고용 · 임금, 출산 · 보육, 주택, 휴대폰, 교통사고 · 위반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출산 · 보육 대신 군복무 · 보훈 등으로 나타났다.

남 · 여 모두 고용 · 임금 관련 민원(퇴직금, 실업급여, 체불임금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율로는 남성(10.3%)보다 여성(21%)이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 보육 민원은 출산, 육아휴직, 보육료 등이 주로 도출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연령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고용 · 임금 민원의 비중이 35.7%로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 · 보육 민원(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12년에는 11년에 비해 40.1%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사회 공(경제활동)·사(출산 및 돌봄 노동 등 재생산 역할) 영역에서 모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의 고충을 읽을 수 있다. 즉 여성들의 빈곤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고용 불안정 및 임금 문제와 기혼여성들의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만큼 공적 영역의 여성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아직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과 여성 고용정책이 이와 같은 여성들의 고충을 반영하길 기대해 본다.

### 유엔경찰, 여성경찰관의 수를 늘릴 것을 촉구

유엔경찰 고문은 전세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격 있는 여성 경찰관을 더 많이 파견해 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2009년 유엔은 2014년까지 여성경찰의 비율을 20%로 늘리기 위한 ‘Global Effort’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으나 현재 여성경찰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성폭력/젠더에 기반 한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로, 여성경찰이 피해자들로 부터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욱 용이하며 또한 여성경찰은 임무수행국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유엔경찰 고문인 Ann-Marie Oler는 여성경찰 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경찰은 최근 최소한 150명의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 유엔 임무 수행 중 꼭 필요한 언어, 운전, 화기다루는 법을 교육시키고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Oler는 유엔 라디오와 가진 최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젠더에 기반 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여성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평화유지를 위한 임무 수행 중에 많은 성폭력/젠더에 기반 한 폭력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폭력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가해자는 제복을 입은 남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여성들에게 제복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2013년 3월 29일 이금형 경찰대학장(경찰청 정무인사기획관)이 경찰인사에서 경찰 창설 이래 첫 여성 치안정감(경찰총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발령되었다.

그러나 여성 경찰의 현실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말 기준 전체 경찰 12,652명 중 여성은 7.6%(7,804명)에 불과하며 경감(6급)이상 간부는 285명, 총경의 여성비율은 1.2%, 경무관은 전체 46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 및 범죄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전체 프로파일러 37명 중 26명이 여성이며, 또한 경찰의 공정성 수준 설문조사결과(2011년 국민500명 대상)에서 여성경찰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85.5%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 고문의 요청은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인구 수 대비 여성대상 폭력

건수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여성 경찰 인력의 증가는 한국사회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한국 여성경찰 인력 배출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사회 요청에도 응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UN News Center, 2013.1.30]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글로벌 플랜 채택

유엔은 130개국 이상이 동의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예방, 철폐에 관한 합의서를 환영하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합의문을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하였다.

17페이지로 구성된 합의문은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심과 실천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인식제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양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보건, 심리적 지원과 상담, 성생식보건권 보호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대표는 “이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각국 정부는 차별,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로의 복귀는 없다.”라고 말했다.

유엔 관료들은 130개국 이상이 동의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예방, 철폐에 관한 합의서를 환영하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역사적인’ 합의서를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에게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극악무도한 인권침해, 전세계적 위협,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 도덕적 분노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10명의 여성 중 7명은 살아가면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개가 넘는 국가에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지만 6억 3백만명의 여성들은 가정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국가에 살고 있다.

한국은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구체적 법률이 있는 사회이지만 역시 그 처벌 수준과 처벌 이후 대처에 있어 아직 여성들의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은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글로벌 플랜에 합의한 국가이며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집권기로서 그에 걸맞은 관련 정책의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13년 중점 연구과제 소개

### 연구과제명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황정임 연구위원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지하실,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상황 등 주거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 빈곤, 주거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가구주가구는 대표적인 주거 빈곤 집단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기초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주거점유형태는 통상 가구단위로, 그 중에서도 남성부양자가구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율 증가, 만혼화와 비혼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가구유형의 출현은 남성부양자가구모델에 기반한 주거점유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들이 갖는 사회경제적지위상, 이들은 주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러나 기존 주거실태 조사자료는 새로운 가구유형의 출현과 확대에 따른 이들의 주거실태와 변화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제한적이다.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에 비해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음을 살펴볼 수 있지만, 소득수준, 16개 지역 등에 따른 분석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정책 역시 이혼, 비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구성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기존의 주거정책은 대부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부부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 중심(즉 결혼기간이 길고 출산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비혼, 이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여성가구의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동안 이혼, 비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구성 변화에 따른 주거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가족구성 변화의 대표적인 집단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및 이에 기반한 정책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거실태를, 특히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비혼, 이혼 등에 따른 여성가구주 가구 출현과 확대에 따른 주거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과제명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 · 평가사업(III)

과제책임자 :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국가 성인지예 · 결산서를 작성,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2013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맞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개념 정립, 많은 부처의 참여, 성별 통계정보의 생산 및 신뢰성 제고, 양성평등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액,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별에 따른 격차 조정 및 일부예산 증액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시행초기이므로 국민이 기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인프라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기반 구축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품질 향상 및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수 연구 인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시의성 있는 지원, 국내외 정보수집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한 지원 및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분석 · 평가사업을

수행하여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종합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도구 개발, 주요 선진국 재정부 및 국내외 기관 간 협력 연구,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을 위한 매뉴얼 등 개발, 국내외 재정환경 및 성 평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적 대응방안 제시 연구,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등과 함께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평가와 효과성 점검, 국가 공무원 등의 의견 조사 분석,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과제명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 과제(II) -가족 관련 판례

연구책임자 : 박복순 연구위원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전 등을 배경으로 여성·가족 관련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그 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던 여성의 법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예컨대,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차별적인 법정 상속분과 이혼 시, 재산분할제 등의 도입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는 향상되었고, 호주제 폐지는 부계혈족중심의 가족제도를 양성평등하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약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 및 자녀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199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민법 제839조의2가 신설되면서 명문으로 인정되어, 20년 가까이 판례와 학설이 축적되면서 재산분할의 비율 기준은 거의 정비되었으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현실과 법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입법취지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리는 법원의 판결 또는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한 판결 등은 법제와 현실의 괴리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판례는 법원이 현행법을 해석·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의미한다. 따라서 판례는 법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뿐 아니라 현행법의 틀 내에서 법리와 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한 문제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법원에 의한 여성·가족 관련 법 해석의 문제점 및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가족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과 가족 관련 사건 실태 및 판례를 분석하고, 가족 관련법 해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KWDI 동정(2013. 1~3)



### 2013 여성신년인사회 개최(2013. 1. 24)

우리 연구원은 1월 24일(목)에 연구원 공동의 장 다목적홀에서 2013년 여성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여성 신년인사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여성계 신년인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이 함께하는 밝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아세안 10개국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 개최(2013.1.28.~2.1)

우리 연구원은 1월 28일(월)~2월 1일(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10개국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의 담론을 주도하고, 사회·문화 각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변화와 정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호교류협력협정(MOU) 체결(2013. 2.15)

우리 연구원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2월 15일(금)에 연구원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상호교류협력협정(MOU) 체결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체결식은 우리 연구원이 2012년도에 수행한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 개선 방안(전기택, 이미정 외)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진행한 설문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상담통계시스템의 구축 완료에 따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전(前)임직원 초청간담회(2013.3.19)

우리 연구원에서는 3월 19일(화)에 개원 30주년을 맞아 전(前)임직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18일 개최하는 다양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들을 미리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2013.3.22)

우리 연구원은 3월 22일(금)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